

[보도자료]

- ▣ 차별에 저항하라!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 ▣ 31년만의 변화, 대중투쟁과 연대를 통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발 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1박2일 전국집중투쟁
배포일자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정다운
분 량	총 4매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
문재인정부의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는 '허위' 보고서!
문재인정부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조작'조사표!*

420장애인차별철폐 1박2일 전국집중투쟁

○ 주최 :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 장애인권리협약 ‘허위’ 국가보고서 /
서비스 지원 ‘조작’ 종합조사표” 규탄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9년 4월 19일(금) 오후 2시.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진입로

“가짜,허위,조작을 멈춰라!”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장례식

○ 일시, 장소 : 2019년 4월 19일(금) 오후 2시30분.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진입로

※ 대회를 마치고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장례 퍼포먼스 및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문화제

○ 일시, 장소 : 2019년 4월 19일(금) 오후 9시. 마로니에공원 무대

※ 문화제를 마치고 1박 노숙투쟁에 돌입합니다.

[본대회]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9년 4월 20일(토) 오전 10시30분. 마로니에공원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9년 4월 18일 현재 약 130여개 단체)

3.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39번째 '장애인의 날'이자 31년만의 변화를 맞이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원년인 2019년 4월 20일을 맞이하여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1박2일 전국집중투쟁을 4월 19일(금)~20일(토) 광화문광장 및 마로니에공원 등에서 진행합니다.**

4. 지난 4월 18일 정부행사로 진행된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며 "다른 것들이 발달해도,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손해를 보며 불편을 느끼신다면, 그 사회는 선진사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몇 가지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면서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에 부응하지 못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 오는 7월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체하여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를 반영하겠다고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활동지원/보조기기/응급안전/거주시설 입소'등 돌봄 영역 4가지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기존 장애등급제와 동일하게 의학적 관점에 입각한 기능제한 수준만을 평가하고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장애등급제'와 유사한 '조직' 조사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6. 또한 계속되는 인권유린의 '감옥'인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가 여전히 허용되고 있으며, 경기 '성심재활원'과 부산 '동향원'등 범죄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는 아직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핵심적 서비스인 주간활동지원의 경우 의미 있는 낮 활동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시간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으로 구분되어 시간이 삭감되는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7. 이러한 가운데 2008년 한국정부도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가 지난 3월 9일 UN에 제출되었지만, 문재인정부는 보고서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초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한국사회 장애인의 현실과는 다른 왜곡된 보고들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등 협약에서 제시한 핵심쟁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정부 장애인의 날 행사 슬로건인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과 같이 말뿐인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과 같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을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9. 이에 420공투단은 문재인정부의 ‘가짜, 허위, 조작’된 장애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월 19일부터 1박2일 전국집중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보장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및 탈시설정책 강화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성 보장 전달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욕구·필요도 반영 - 하루 24시간 보장 제도화 - 65세 연령제한·본인부담금 폐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8시간 '20년 1만명 보장 ■ 장애인보조기기 권리보장 ■ 장애인의사소통 권리보장(청각/발달/뇌병변) ■ 개인별 지원서비스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내 장애인거주시설 완전 폐지 ■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 장애인지원(자립생활)주택 2만호 공급 ■ 탈시설정착금·주거서비스 예산 확대 ■ 2022년까지 대형시설(30인 이상) 30인 이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장애 유형 및 개인별 필요도 반영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및 당사자 참여 보장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및 전달체계 마련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 교육 및 주거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폐차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고속·시외·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장애인 단체이동권리 보장 ■ 모든 교통수단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중증/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20년 8,000명 증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 공공일자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통합교육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 장애인 주거지원 국가계획 수립 ■ 공공임대주택 장애인지원주택 제도화 ■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 주택개조지원 제도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장애인연금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부양의자기준 완전 폐지